



서울 시내에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완전경쟁’ 안정성·실효성 의문... 금융시장 실익 따져봐야

당국, 은행권 제도개선 TF 회의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 방안 논의
일각선 관치·포퓰리즘 비판도 “숫자 늘리기 정당 될 수 없어”

금융당국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과점체제 해소 위해 신규은행 인가 등 경쟁자를 늘려 과점 체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다만 태스크포스(TF)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는 지난 2일 첫 실무자담판 회의를 갖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논의 방향은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촉진 ▲기존 은행권내 경쟁 촉진이다.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과점 체제에서 ‘이자 장사’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신한금융 4조4233억원, KB금융 4조4133억원, 하나금융 3조6257억원, 우리금융 3조1693억원, 농협금융 2조2309억원 등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과점 체제 깨면 금융안정 어려워” 사상 최대 실적은 금리 인상을 맞아 예대금리차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이다. 지주별 이자이익은 KB금융 11조

3814억원, 신한금융 10조6757억원, 농협금융 9조5559억원, 하나금융 8조9198억원, 우리금융 8조6966억원 규모로 1년 간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50조원에 근접한다. 이처럼 시중은행 독식 형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4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등 또 다른 ‘메기’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 자체

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 속 ‘메기’ 역할 및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확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은행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경쟁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대 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의 62~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에도 은행의 과점 체제는 여전히 있다.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또한 핀테크 업체는 대손충당금·예대금 규제나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자본 규제 등이 적용안돼 향후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은행 숫자 늘리기는 정당 아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건전성 악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한계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기존 지방은행의 영업 방식과 수익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숫자를 늘리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며 “추가 설립된 은행들이 제대로 은행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금융의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내 은행의 과점 강도가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정부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금융당국의 은행 이사회 정례회의, 금리 산정 개입 정책 등이 새로운 ‘관치’란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내에서 사업권을 따서 사업하는 곳은 모두 공공재라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며 “금융은 정확하게는 공공재도 아니고 사적 재화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isy2665@metroseoul.co.kr

경쟁기류 올라타는 지방은행... 수도권 여신 등 반사이익 기대감

빅테크 제휴 등 경쟁력 확보 분주 일각선 지방은행 정체성 퇴색 우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독과점’을 지적함에 따라 지방은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흔들기 위해 기존 지방은행 중 요건을 갖춘 곳의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금리와 영업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오던 지방은행도 가계대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제도개선 TF 첫 실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기존 저축은행을 새 지방은행으로, 기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실화할 경우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이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은행권에 각각 변동이 예상된다. 실제 주요 지방은행은 최근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높이는 데 이어 빅테크



(왼쪽부터) DGB금융·BNK금융·JB금융지주 본사. /각사



(왼쪽부터) DGB금융·BNK금융·JB금융지주 본사. /각사



(왼쪽부터) DGB금융·BNK금융·JB금융지주 본사. /각사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국내 주요 지방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대 지방금융지주(BNK·JB·DGB)의 전체 원화대출금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중은 14.6%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9.9%) 대비 4.7%포인트(p)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JB금융이 수도권 여신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다. 전북·광주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은 28.2%로 BNK금융(부산·경남은행, 8.4%)이나 DGB금융(대구은행, 15.8%)에 비해 큰 폭으로 앞섰다. 반면 최근 5년간 성장세에선 DGB와 BNK가 앞섰다. 기업영업전문역(PRM) 제도 등을 도입해 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이어온 DGB는 지난 5년간 수도권 여신 성장률이 279.9%에 달했다. BNK금융 역시 202.8%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JB는 23.23%로 큰 두각은 보이지 못했다.

지방은행이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본거지인 지방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감소 영향으로 성장성에 제약이 받으면서 수도권에서 활로를 뚫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지방은행들은 빅테크 업체와도 손을 맞잡고 대출금 규모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토스에 따르면 토스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5대 지방은행(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은행)이 지난해 토스를 통해 실행한 연간 대출금은 1조

6015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51억원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 60배 이상 성장했다. 2020년에는 4573억원, 2021년 9532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연간 증가율은 2021년 108%, 2022년 68%를 나타냈다. 이는 빅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보완하면서 전국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금융사 한 관계자는 “최근엔 지방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분위기다”면서 “지방은행이 수도권으로 활로를 넓히는 것이 금융권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아성을 구축한 시중은행은 물론, 신흥강자인 인터넷전문은행도 중금리 및 기업 대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격화될 수도권 시장에서 지방은행만이 가진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